

작성: 김진솔 연구원 (kim.jin.sol@ydi.or.kr)

1. 개요

- 11.13(현지),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‘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’(COP26)가 예정보다 하루 늦게 폐막
 - ‘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’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번 회의엔 197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, 기업인, 언론인 등 약 4만명이 참여
 - 10.31(日) 개막한 이번 총회는 당사국 간 입장 차로 마감기한 하루를 넘긴 13일까지 협상이 지속
- 참가국들은 최종선언문 성격인 ‘글래스고 기후조약(Glasgow Climate Pact)’을 공식 채택하며 최종 협상을 마무리
 - 지구온도 1.5도 상승억제를 위한 적응재원, 감축, 협력 등의 분야에서의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으나, 탄소중립 시기는 2050년에서 금세기 중반으로 후퇴
-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, 공무원,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
 - 6년만에 특별정상회의(11.1~2)가 개최,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설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(NDC) 40% 상향, 남북산림협력 등을 선언

2. 주요 합의사항 및 한계

① 석탄 등 화력발전 단계적 축소

- 지구온난화 주범인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,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종단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, 최초로 합의문에 ‘석탄’과 ‘화석연료’가 언급
- 다만 중국·인도 등의 반발로 당초 목표한 ‘단계적 폐지(phase out)’에서 ‘단계적 축소

(phase down)'로 후퇴했다는 지적

- 석탄, 석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의 단계적 폐지도 협정에 들어갔지만, 일부 국가의 반대로 구체적 종료시점은 미설정
- 이와 별개로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에서 성명을 통해 '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'를 선언, 선진국은 2030년까지 개도국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약속
- 석탄 다소비국인 중국, 인도, 호주뿐 아니라 미국, 일본은 해당 선언에 불참

②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기금 재원 2배 확대

-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기금 재원을 최소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
-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“2020년까지 기후재원 조성 목표 연간 1천억불 달성”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
- ※ 기후재원 규모: (2016) 586억달러 → (2017) 712억달러 → (2018) 789억달러 → (2019) 796억달러
-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금 마련에 기여한다는 입장

③ 파리협정 6조 세부이행규칙 마련

- 지난 6년간 협상 끝에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, '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'(Paris Rulebook) 완성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 통일된 국제규범이 마련
- 이에 따라 국제탄소 시장에서 탄소감축 실적이 양국에 모두 반영되는 '이중사용 방지' 규정 마련
- 산림부문은 세부규칙타결로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(REDD+) 등을 통한 국외감축실적이 국가간 이전이 가능

④ “지구온도 상승 1.5도 제한” 재확인 및 2022년 NDC 재점검

- 각국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“지구온도 상승폭을 1.5도로 제한하자”는 목표는 유지
- 이에 따라 개별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 '1.5도 상승폭 제한'에 맞게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
- 통상 NDC는 5년마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 목표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폭이 2.4도에 달할 것이라 분석
- 내년도 NDC 재점검과 별개로 5년 주기로 NDC 설정, 2025년에는 2035년 NDC, 2030년에는 2040년 NDC를 제출하는 등 매 5년마다 차기 NDC 제출을 명시

3. 평가 및 시사점

- 선진국-개도국 간 입장차로 목표보다 후퇴한 ‘절충안’으로 마무리
 -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에는 공감대 형성, 최초로 합의문에 탄소다배출 ‘석탄발전’을 언급, 파리협정 세부이행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
 - 탄소다배출 국가들이 탄소중립 시기를 목표시한 2050년보다 늦은 △중·러 2060년, △인도 2070년으로 제시하는 등 각국의 견해 차가 여실히 드러난 총회로 평가

- ‘탄소중립 시간표’ 늦춘 국가들, 공허한 선언되지 않기 위해 속도조절론 주장
 - 코로나 여파, 에너지 위기 등을 감안, COP26에서 선불리 목표치를 내놓지 않은 것
 - 특히 유럽, 미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, 탄소감축 실패시 고율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

- 협상 막판까지 최종선언문에 자국 입장 반영 노력한 국가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NDC 목표 상향 발표, 석탄 폐지 선언 등을 감행
 - 올여름 블랙아웃 위기에 석탄발전 58기 중 57기를 풀가동 해놓고 ‘석탄발전 폐지’를 선언, 대책없이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
 - ※ 2021.8월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석탄의 발전설비 비중은 28%, 발전량은 40.5%를 차지

- 말로만 탄소중립이 아닌 현실성 있는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, 이번 대선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
 - 기후변화 대응엔 ‘탄소감축 vs. 자국경제’ 딜레마를 풀어내는 게 급선무라는 점 강조, 탄소감축을 위해선 탈원전 정책 폐기가 우선임을 강조
 - 특히 기후문제는 2030세대 주요 관심 이슈인 바 후보 및 캠프에서 줍깅,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등을 선거국면에서 활용하는 것도 긴요